

# 2021 국회8급 행정학 기출문제

[2021.04.24 시행]

## COMMENT

선행행정학 100% 완벽적중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1 국회8급 행정학은 예상대로 7급수준 이상으로 디테일하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국회직답게 법령문제도 다수 출제되어 9급 개론수준의 준비를 한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히 체감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행행정학 커리를 충실히 따른 수험생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이 90점 이상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부 정형화된 기출문제(문1의 징계, 문8의 행정학의 접근법 등)도 있었지만 수업 중에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한 최근 법령개정문제(문2의 지방재정문제)나 경계지점의 신경향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고, 또한 선행행정학 교재나 수업 때 언급한 표현들이 그대로 출제된 지문들도 많았습니다(문6의 공직윤리, 문7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다른 수험생들과 점수 차별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8급을 경험삼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하여 앞으로 다가올 국가7급과 지방7급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대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규

### 우리나라의 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견책은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토록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는 효력을 가진다.
- ② 감봉은 보수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액의 2/3를 감한다.
- ③ 강등은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 ④ 해임은 강제퇴직의 한 종류로서 3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된다.
- ⑤ 파면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5년간 재임용 자격이 제한된다.

2021 7급 선행정학 p.591

정답 · 해설

답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를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과 승진이 정지된다.

- ☑ ① [○]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급이 정지된다.
- ③ [○]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하고 18개월간 승급이 정지된다.
- ④ [○] 해임은 강제퇴직의 한 종류로서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된다.
- ⑤ [○]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5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된다.

#### ☞ 징계의 종류

☞ 견감정강해파

|    |                                                  |
|----|--------------------------------------------------|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6개월간 승급 정지                  |
| 감봉 | 1~3월간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 정지                |
| 정직 | 1~3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전액을 삭감, 1년6월간 승급 정지           |
| 강등 | 1계급 하향조정, 3개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전액을 삭감, 1년 6월간 승급 정지 |
| 해임 | 강제퇴직,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에 원상상 영향 없음            |
| 파면 |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의 1/4~1/2 지급 제한            |

###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교부세의 재원에는 내국세 총액의 19.24%,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포함된다.
- ②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되었다.
- ③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재원으로 하였으나 2020년 100의 40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④ 특별교부세는 그 교부 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통합 · 일원화되었다.
- ⑤ 국고보조금은 지정된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2021 7급 선행정학 p.887

정답 · 해설

답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19.24%),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 그리고 전년도 정산액을 재원으로 한다.

- ☑ ② [×] 지방교부세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된 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이다(2015.1. 신설).
- ③ [×]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20을 재원으로 하였으나 최근 「지방교부세법」의 개정(2020.4.1.)으로 **100분의 45**로 인상되었다.
- ④ [×]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사유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정 기준에 의하여 교부한다.
- ⑤ [×] 국고보조금은 구체적인 보조 목적 사업에만 사용되는 **특정재원**이다.

## 지방교부세의 종류

| 종류       | 개념                                                 | 재원                                              | 용도    |
|----------|----------------------------------------------------|-------------------------------------------------|-------|
| 보통 교부세   |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 재정수요액)가 1 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 [내국세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97                 | 일반 재원 |
| 특별 교부세   | ① 기준재정수요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시 교부             | 40/100                                          | 특정 재원 |
|          | ②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                | 50/100                                          |       |
|          | ③ 국가적 장려, 국가와 지방 간 시급한 협력, 역점시책, 재정운용 실적 우수 시 등 교부 | 10/100                                          |       |
| 소방안전 교부세 | 소방인력의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교부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sup>1)</sup> + 정산액 | 특정 재원 |
| 부동산 교부세  | 재정여건 및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부                         | 중부세 전액 + 정산액                                    | 일반 재원 |

1) 종전 20/100이 45/100으로 인상되었다(2020.4.1. 지방교부세법 개정)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교

| 구분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
|--------|-------------------------------------------------------------------|-----------------------------------|
| 근거     | 지방교부세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재원     | 내국세의 19.24%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 <sup>1)</sup> + 종합부동산세 전액 + 정산액 |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원 - 재량에 의한 보조 |
| 용도     | 용도 지정이 없는 일반재원(기본행정수요경비)                                          | 특정재원으로 구체적인 보조목적 사업(국가시책과 정책적 고려) |
| 지방비 부담 | 없음(정액보조) - 현금보조적 성격                                               | 있음(정률보조) - 현물보조적 성격               |
| 재량(통제) | 많음(약함) → <b>격차시정 ○</b>                                            | 거의 없음(강함) → <b>격차심화 ○</b>         |
| 기능     | 재정의 형평화(형평화 보조금)                                                  | 자원배분의 효율화(효율화 보조금)                |
| 조정의 성격 | 수직적 · 수평적 조정재원                                                    | 수직적 조정재원                          |
| 교부주체   |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관서의 장(주무장관)                     |

1) 2020.4.1.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가 45%로 인상되었다.

## 행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방정부 A시는 최근 일정 나이의 청년들에게 월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청년소득 정책을 실시하였다. 청년소득 지급이 청년들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년소득 정책 실시 전후 대상자들의 고용현황을 측정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를 청년소득의 효과라고 해석하려고 한다. 그런데 두 측정시점 사이에 경기불황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① 호손효과                      ② 검사요인
- ③ 역사적 요인                  ④ 회귀인공요인
- ⑤ 오염효과

2021 7급 선행정학 p.316

### 정답 · 해설

답 ③

제시문은 청년소득 정책과 그 정책의 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측정하려는 것으로, 정책의 투입과 효과의 발생 사이에 경기불황이라는 역사적 요소(사건)가 외부에서 발생하여 내적 타당도의 측정을 어렵게 만든 것이므로 이는 **역사적 요인** 또는 **사건효과**에 해당한다.

## 정책평가의 타당도 저해요인

|        |        |                                                               |
|--------|--------|---------------------------------------------------------------|
| 내적 타당도 | 선발효과   | 집단을 구성할 때 선발의 차이로 인한 오류                                       |
|        | 역사적요인  | 실험기간 동안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오류(사건효과)                             |
|        | 성숙효과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 성장에 의한 오류(성장효과)                                |
|        | 상실요소   | 두 집단 간 구성상의 변화(탈락, 이탈)로 인한 오류                                 |
|        | 측정요소   | 측정(테스트)한 사실 자체가 사후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현상(시험요인 또는 검사요인)               |
|        | 측정도구변화 | 측정도구의 일관성(신뢰도) 결여로 인해 내적 타당성이 저하                              |
| 외적 타당도 | 회귀인공요소 | 실험직전 단 한번 측정된 극단치에 의한 오류(실험직전반응 효과)                           |
|        | 오염효과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모방이나 누출현상                                         |
|        | 호모돈효과  | 인위적으로 통제된 실험의 경우 실험대상임을 알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면 결과의 일반화 곤란 (실험조작 반응효과) |
|        | 다수처리간섭 | 여러차례의 실험조작에 익숙해져서 일반화 곤란                                      |
|        | 대표성부족  | 집단의 사회적 대표성 부족으로 인한 일반화 곤란                                    |
|        | 크리밍효과  | 효과가 크게 나타날 양호한 사람만 실험집단에 배치하는 현상                              |

외-대호크다

## 정부 예산에 대한 이론 중 다중합리성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예산 혹은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합리성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사회·법적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관료들은 예산주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단계별로 작용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
- ② 예산재원의 배분 형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균형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이후 합리적 균형을 지속하게 된다.
- ③ 예산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기초해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우선 문제를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한다.
- ④ 예산 결정은 전체적인 혹은 종합적인 관점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 일정 규모의 증가에 그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⑤ 관료를 공익을 대변하는 합리적 대리인이 아니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기적 합리성을 따르는 경제적 주체로 본다.

2021 7급 선행정학 p.674

정답 · 해설

답 ①

다중합리성모형(Thumair & Willoughby)에서는 예산과정의 각 단계(흐름)별(5단계 : 세입, 세출, 집행, 균형, 과정)로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복수의 합리성(경제적 합리성뿐 아니라 정치·사회·법적 합리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관료들은 예산주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단계별로 작용하는 복수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다중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본다. 다중합리성모형은 흐름창모형(Kingdon)과 실시간예산모형(Rubin)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

- ☒ ② [×] 단절균형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 ③ [×] 합리주의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 ④ [×] 점증주의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 ⑤ [×] 예산극대화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 ☞ 정부예산에 관한 미시적 이론

|         |                                                                                                                                                                                                                                               |
|---------|-----------------------------------------------------------------------------------------------------------------------------------------------------------------------------------------------------------------------------------------------|
| 합리주의    | 기회비용 기준 등 계량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하여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최적의 예산배분방안을 강구하는 규범적 방법 (PPBS, ZBB 등)                                                                                                                                                    |
| 점증주의    | 현실상황을 인정하고 전년대비 일정규모의 증가에 그치는 배분을 지향.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현실적 접근법으로 반혁신적 모형                                                                                                                                                                         |
| 공공선택론   | 관료는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인 경제인으로 가정.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치가와 달리 관료들은 개인효용이나 소속부서의 예산 극대화가 목적함수                                                                                                                                         |
| 다중합리성모형 |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중앙예산실의 예산분석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로 미시적으로 분석한 모형으로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 등 예산주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예산과정 각 단계(흐름)별로 서로 다른 복수의 합리성(경제적 합리성 뿐 아니라 법적, 정치적, 사회적 합리성 등)과 환경이 예산관료들의 행태를 지배(영향)하므로 단계별로 예산 활동 및 행태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적 접근법 |
| 단절균형모형  | 예산이 급격한 변화나 단절을 겪은 이후 다시 균형을 지속한다는 예산모형으로 예산이 전년대비 일정 정도의 변화에 그친다는 점증주의예산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                                                                                                                                                       |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행정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ICT기술의 발달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운영된다.
- ② 대규모 정보에 대한 분석으로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③ 정보 및 분석기술의 발달로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촉진될 수 있다.
- ④ 정보의 공개와 유통으로 간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시민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 ⑤ 행정서비스의 종합적 제공을 위한 플랫폼 중심의 서비스가 발달한다.

2021 7급 선행정학 p.799

정답 · 해설

답 ④

4차 산업혁명은 산업과 산업간 초연결성과 초지능성, 초예측성을 토대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며,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증진시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 ☒ ① [○]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가능하게 한다.
- ② [○] 초지능성, 초예측성,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한다.
- ③ [○] 정보화는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촉진시킨다.
- ⑤ [○] 4차 산업혁명은 공공정보를 이용하여 민관이 함께 콘텐츠를 개발하는 플랫폼정부를 지향한다.

#### 4차산업혁명

##### (1) 의의

3차 산업혁명(지식·정보혁명)을 기반으로 물리적·가상적·생물학적 영역의 융합을 통해 사이버 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을 구축하는 것으로 2016.1.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Schwab)에 의하여 처음 사용

##### (2) 특징

- ① 초연결성 : 사람-사람, 사물-사물, 사람-사물 등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을 연결 (사물인터넷 : IoT)
- ② 초지능성 :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인간생활의 패턴 파악
- ③ 초예측성 : 초연결성·초지능성을 토대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

##### (3) 3차 산업혁명과의 차이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기술발전의 속도와 범위, 시스템적 충격이라는 측면에서 3차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반적인 문화 혁명

#### 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품위 유지의 의무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②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 ③ 육군 소장과 강원도 소방정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의무가 있다.
- ④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50만원이다.
- 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경기도의 교육장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2021 7급 선행정학 p.606

정답 · 해설

답 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시·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 **교육지원청의 장**

- ☒ ① [×] 품위 유지의 의무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② [×]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 등은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 ③ [×] 군인의 경우 재산공개대상자는 중장 이상의 장교이므로 육군 소장은 재산공개의무가 **없다**.
- ④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경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원**이다.

## ☞ 공무원 윤리의 법적 근거

| 자율규제윤리       | 공무원헌장                    | 창의, 다양, 투명, 전문, 공정, 공익, 민주                                                                                                                                                                                                                                                    |
|--------------|--------------------------|-------------------------------------------------------------------------------------------------------------------------------------------------------------------------------------------------------------------------------------------------------------------------------|
| 법령적·강제적·규제윤리 | 헌법                       | 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br>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
|              | 국가공무원법                   | ① 성실의무 :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수행<br>② 복종의무 :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br>③ 직장이탈금지 의무 : 상관의 허가 필요<br>④ 친절 · 공정의무<br>⑤ 종교중립의 의무<br>⑥ 비밀엄수의무 : 재직 중 + 퇴직 후<br>⑦ 청렴의무 : 사례 · 증여 · 향응 금지<br>⑧ 영예 등의 수령규제 : 대통령 허가 필요<br>⑨ 품위유지의무<br>⑩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 기관장 허가 필요<br>⑪ 집단행위금지<br>⑫ 정치활동금지<br>⑬ 선서의 의무 |
|              | 공직자윤리법                   | ①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 4급 이상 등록, 1급 이상 공개<br>② 선물수수 등의 신고 · 등록의무(미화 100불, 한화 10만원 이상)<br>③ 취업제한의무(재산등록의무자) : 퇴직 후 3년 간(퇴직 전 5년)<br>④ 이해충돌방지 의무<br>⑤ 주식백지신탁의무 : 1급 이상, 3,000만원 이상<br>⑥ 행위제한의무 : 업무취급제한 등 <span style="color:blue">▶ 이선재주취행</span>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 ① 공직내부비리 발견 시 신고할 의무(내부고발자 보호제도)<br>② 비위공직자 취업제한 의무(퇴직 후 5년 간, 퇴직 전 5년)<br>③ 국민감사청구제도 : 감사원에 청구(300명 이상 서명)                                                                                                                                                                   |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 ①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 금지 : 법령 위반 청탁 금지<br>②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금지 :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형사 처벌(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는 허용)<br>③ 위반행위 신고의무                                                                                                                        |

## ☞ 재산등록대상자와 공개대상자(공직자윤리법) <sup>1)</sup>

|           | 등록대상자                      | 공개대상자                   |
|-----------|----------------------------|-------------------------|
| 정무직       | 전원                         | 전원                      |
| 일반직 · 별정직 | 4급 이상(상당 별정직)              | 1급 이상(상당 별정직)           |
| 법관 · 검사   | 모든 법관 및 검사                 | 고법 부장판사 이상<br>대검 검사급 이상 |
| 군인 등      | 대령 이상의 장교                  | 중장 이상의 장교               |
| 경찰소방      | 총경, 소방정 이상                 | 치안감, 소방정감 이상            |
| 공공기관      | 공기업의 장 · 부기관장, 상임이사 · 상임감사 | 공기업의 장 · 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
| 교육공무원     | 총장, 학장, 교육감, 교육장 등         | 총장, 학장, 교육감 등           |

1)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상 등록대상자

- ① 7급 이상 감사담당(감사원 및 각 부처)
- ② 7급 이상 부패방지담당(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
- ③ 경사 이상 경찰직(경정, 경감, 경위, 경사)
- ④ 소방장 이상 소방직(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 ⑤ 7급 이상 세무 · 회계 담당(국세청 · 관세청 등)
- ⑥ 7급 이상 수사직(검찰사무, 마약수사, 위해사범수사 등)
- ⑦ 7급 이상 건축 · 토목 · 환경 · 식품위생분야 인허가 등 대민업무 담당

07 중요도 ■■■ 난이도 ■■■

2021 국회8급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 ② 공공기관심의위원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심의 ·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③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 ④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 결정되지 아니한다.
- 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지표로서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조직 · 인사 · 재무관리, 혁신과 소통 등이 포함된다.

2021 7급 선행정학 p.441

정답 · 해설

답 ②

공공기관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공공기관의 운영, 지정, 지정해제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 ☑ 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③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다.
- ④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이나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인사상 · 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지만 민영화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 경영평가는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조직 · 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무운용의 건전성, 고객만족도, 성과급 지급제도의 합리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선택론은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개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주의적 접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 ② 후기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보다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한다.
- ③ 비교행정 연구모형을 제시한 리그스(Riggs)의 연구는 행정 현상을 자연, 사회, 문화적 환경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생태론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 ④ 신제도론은 외생변수로 다루어져 오던 정책 혹은 행정 환경을 내생변수와 같이 직접적인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 ⑤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권력, 의사전달, 정책결정의 문제와 행정의 가치문제를 중시한다.

2021 7급 선행정학 p.130

정답 · 해설

답 ⑤

체제론은 거시적인 환경요소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조직내 권력이나 갈등, 의사전달, 정책결정, 가치문제, 인간의 행태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 ☑ ① [○]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개인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균형이론이자 보수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 ② [○] 후기행태주의는 가치중립적인 행태론을 비판하며, 적실성과 실천으로서 가치지향적인 정책연구를 강조한다.
- ③ [○] 리그스(Riggs)는 비교행정을 위한 하나의 일반모형으로 생태론을 정립하여 행정현상을 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 ④ [○] 신제도론은 정책이나 환경을 외생변수뿐만 아니라 구제도주의, 다원주의, 행태주의와 달리 이들을 내생변수로 취급하여 제도와 정책, 환경 간의 연관성까지도 다룬다.

### 광역행정의 방식 중에서 법인격을 갖춘 새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만을 다음에서 모두 고르면?

- |             |          |
|-------------|----------|
| ㄱ. 사무위탁     | ㄴ. 행정협의회 |
| ㄷ. 지방자치단체조합 | ㄹ. 연합    |
| ㅁ. 합병       |          |

- |        |        |
|--------|--------|
| ① ㄱ, ㄷ | ② ㄴ, ㄹ |
| ③ ㄷ, ㄹ | ④ ㄷ, ㅁ |
| ⑤ ㄹ, ㅁ |        |

2021 7급 선행정학 p.842

정답 · 해설

답 ④

법인격을 갖춘 새로운 기관이 신설되는 경우는 ㄷ. 자치단체조합과 ㅁ. 합병이다.

- ☑ ㄱ [×] 자치단체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 기관을 설립하지 않는다.
- ㄴ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이는 **법인격이 없다**.
- ㄷ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진다.
- ㄹ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행정업무를 위해 별도의 광역행정기관을 설치하지만 연합정부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음**이며 각 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 ㅁ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을 통폐합시켜 새로운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를 창설하는 방식이다.





##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선관료의 업무환경에서 모호하고 대립된 기대는 일선관료들의 집행성과에 대한 기대 중 비현실적이거나 상호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 ② 일선관료는 일반 시민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당한 자율성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 ③ 육체적 · 신체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는 ‘잠재적 공격자’의 특징을 사전에 정의함으로써 집행현장의 의사결정을 단순화하는 방법이 있다.
- ④ 일선관료는 시간과 정보 · 기술적인 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집행을 하게 된다.
- ⑤ 부족한 자원에 대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름길’을 택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정책대상집단과의 갈등이나 결정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피하는 것이다.

2021 7급 선행정학 p.282

정답 · 해설

답 ④

일선관료는 자원이 불충분할 경우에 정책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집행하기 보다는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행정의 단순화 · 정형화로 이어져 일선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 ☑ ① [○] 일선관료의 집행성과에 대한 고객의 목표와 기대는 모호하고 대립되며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고 상호갈등을 일으킨다.
- ② [○] 일선관료는 정책의 최종적 과정에서 고객과 접촉하며 상당한 자율성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 ③ [○] 관료들은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고객을 사전에 단순화 또는 유형화(가난한 사람과 부자, 전과자와 비전과자 등)하여 복잡한 상황을 관리해 나간다.
- ⑤ [○] 부족한 자원에 대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지름길을 택하는 것으로 간헐적이고 기계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정책대상집단과의 갈등, 심리적 불안을 피하는 방법으로 기계적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 ☑ 일선관료제론(Lipsky)

|                           |                                                                                                                                                                                                                                           |
|---------------------------|-------------------------------------------------------------------------------------------------------------------------------------------------------------------------------------------------------------------------------------------|
| 일선관료의 직무상 특징<br>- 직무의 자율성 | <p>① 일선관료는 고객접점으로서, 공공복지행정 분야일수록 중요</p> <p>② 일선관료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 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상황들은 일률적으로 정형화시키기가 곤란</li> <li>• 일선관료들은 서면처리가 아닌 사람을 대면</li> <li>• 서비스의 기준 · 양과 질 등에서 고객을 재량적 분류 (선별)</li> </ul> |
| 현실과 업무환경 <sup>1)</sup>    | <p>① 불충분한 자원: 인적 · 물적 자원이나 시간 · 기술적 지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p> <p>②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 존재한다.</p> <p>③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부서의 목표가 애매하거나 이율배반적이다.</p> <p>④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결여되어 있고, 효과적인 통제체제도 없다.</p> <p>⑤ 고객은 수동적이다.</p>                              |
| 결론                        | 일선관료들의 잘못된 적응메커니즘(정형화 · 단순화)으로 고객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함으로써 일선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

1) 일선관료들의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①②③을 든다.

다음 글의 ㉠에 해당하는 것은?

톰슨(Thompson)의 이론에 따르면, ㉠의 경우 단위 부서들 사이의 과업은 관련성이 거의 없으며 각 부서는 조직의 공동목표에 독립적으로 공헌하게 된다. 이러한 ㉠은 주로 중개형 기술을 활용하는 조직에서 나타나는데 부서들이 과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단위작업간의 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 있는 경우 부서간 의사소통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관리자들은 부서간 조정을 위해 표준화된 절차와 규칙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 ① 교호적 상호의존성(reciprocal interdependence)
- ② 연속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
- ③ 집합적 상호의존성(pooled interdependence)
- ④ 과업의 상호의존성(task interdependence)
- ⑤ 공동의 상호의존성(common interdependence)

2021 7급 선행정학 p.391

정답 · 해설

답 ③

톰슨(Thompson)의 기술유형론 중 중개적 기술을 활용하는 조직에서 나타나는 집합적 상호의존성(pooled interdependence)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서 중개적 기술이란 서로 관련성이 없는 기술로써 고객들을 연결하여 독자적으로 조직목표에 공헌하는 기술로서 표준화를 추구한다. 부서간 상호의존성은 단순히 전체를 통해서 함께 의존관계에 있는 단순한 집합적(pooled) 의존관계여서 갈등의 소지가 낮다.

#### Thompson의 기술유형

|           |                              |
|-----------|------------------------------|
| 중개적 기술    | 단순한 독자적 기술, 표준화 가능, 집합적 의존관계 |
| 길게 연결된 기술 | 갈등 어느 정도 있음, 연속적 의존관계        |
| 집약형 기술    | 갈등 많음, 표준화 곤란, 교호적 의존관계      |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업무수행자가 복잡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수행방식을 법규나 지침으로 경직화시키지 않는다.
- ② 전문성이 강한 전문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업무의 동질성이 높다.
- ③ 수평적 분화의 정도는 높은 반면, 수직적 분화의 정도는 낮다.
- ④ 태스크포스는 특수한 과업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 본래 목적이 달성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 ⑤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의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협력업체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협력업체들은 하위조직이 아니며 별도의 독립된 조직들이다.

2021 7급 선행정학 p.408

정답 · 해설

답 ②

애드호크라시 조직은 적응력과 창조성이 강하며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비일상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에 적합하다. 즉, 업무나 기능의 동질성이 낮으며 따라서 기능별 구조가 편제가 어렵다.

- ☑ ① [○] 애드호크라시는 불확실한 환경(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적합한 조직이므로 과업의 표준화나 공식화(SOP)를 거부(배격)하며 업무수행방식을 경직화시키지 않는다.
- ③ [○] 애드호크라시는 구조적으로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이 낮지만, 복잡성의 경우 수평적 분화는 높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 경우 수평적 분화는 일의 전문화나 기능별 분업이 아니라 사람의 전문화 내지는 흐름별 분업을 말한다. 수직적 분화의 정도는 아주 낮은데, 이는 다단계의 계층적 관리구조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 ④ [○] 임시조직인 태스크포스(task force)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⑤ [○] 네트워크 조직(network organization)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발안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는 임기 만료 1년 미만일 때는 청구할 수 없다.
- ③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을 직접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은 자신의 권익에 침해가 없는 경우에도 주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수립된 주민의 의견은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2021 7급 선행정학 p.894

정답 · 해설

답 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수립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① [○] 우리나라의 주민발안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간접발안제도이다.
- ② [○] 주민소환제도는 임기만료 1년 미만, 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없다.
- ③ [○]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가 있을 때는 물론,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직권으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 주민소송은 본인의 개인적 권리나 이익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공익소송 · 민중소송 내지는 대표소송의 성격이 강하다.

##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정책의제설정모형은?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회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새마을운동은 국가의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하고, 노력하도록 자극을 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 ① 동원형 정책의제 설정
- ② 내부접근형 정책의제 설정
- ③ 외부주도형 정책의제 설정
- ④ 군히기형 정책의제 설정
- ⑤ 대중인식형 정책의제 설정

2021 7급 선행정학 p.209

정답 · 해설

답 ①

동원형은 정부가 의제를 일방적으로 채택한 후 정책순응 확보를 위해 문제를 행정PR 등에 의하여 이슈화 및 공중의제화하는 유형으로, 주로 후진국(민간 부문이 취약한 계층사회나 권위주의사회)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례로는 새마을운동,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유치, 가족계획사업, 경제개발계획 등이 있다.

### Cobb & Ross의 정책의제 설정모형 비교(채경석)

|      | 외부주도형                    | 동원형                      | 내부접근형             |
|------|--------------------------|--------------------------|-------------------|
| 형성방향 | 외부 → 내부                  | 내부 → 외부 (PR활용)           | 내부 → 내부 (PR없음)    |
| 순서   | 사회문제 → 이슈화 → 공중의제 → 제도의제 | 사회문제 → 제도의제 → 이슈화 → 공중의제 | 사회문제 → 제도의제       |
| 의제성격 | 강요된 문제                   | 채택된 문제                   | —                 |
| 공개성  | 높음                       | 중간                       | 낮음                |
| 참여도  | 높음                       | 중간                       | 낮음                |
| 사회   | 평등사회                     | 계층사회 (권위주의)              | 불평등사회 (부와 권력의 편중) |

###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2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감사원은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21 7급 선행정학 p.728

정답 · 해설

답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① [○] 결산보고서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계속비결산보고서, 통합재정수지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 ②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소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의 경우 예비금제도가 인정된다. 국회의 사무총장은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 감사원은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여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우리나라의 결산일정

|                                                   |                 |
|---------------------------------------------------|-----------------|
| 출납정리기한(현금출납 마감 기한)                                | 당해 연도 12.31. 까지 |
| 출납기한(출납사무 마감 기한)                                  | 다음 연도 2.10. 까지  |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제출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
|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 | 다음 연도 4.10. 까지  |
|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검사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 제출                   | 다음 연도 5.20. 까지  |
| 정부(기획재정부장관)가 국회에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 다음 연도 5.31. 까지  |
| 국회의 결산심의 완료                                       | 정기회 개최 전        |

→ 매년 9월 1일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다음에서 모두 고르면?

- ㄱ. 공무원이 반응해야 하는 대상을 고객과 유권자 집단으로 본다.
- ㄴ. 책임성 확보의 방법으로 개인이익의 총합을 통해 시민 또는 고객집단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하는 방법을 추구한다.
- ㄷ. 행정재량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제약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 ㄹ. 공익의 개념은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이다.
- ㅁ. 공무원의 동기를 유발하는 수단은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와 사회봉사이다.

-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2021 7급 선행정학 p.181

정답 · 해설

답 ②

ㄱ, ㄴ, ㅁ은 틀리다.

- ☑ ㄱ [X] 공무원이 반응해야 하는 대상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이다.
- ㄴ [X] 책임은 단순하지 않으며, 민주시민은 자기이익추구의 수준을 넘어 공익에 관심을 갖는 존재로서, 공익을 개인 이익의 총합으로 보지 않으며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본다.
- ㄷ [O] 정부의 책임은 시장뿐 아니라 헌법, 법률, 공동체 가치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행정의 재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량에 대한 제약과 책임이 수반된다고 본다.
- ㄹ [O] 공익을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한다.
- ㅁ [X] 공무원의 동기를 유발하는 수단은 정부 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보다는 **시민정신에 부응**하려는 사회봉사이다.

#### 전통적 행정,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의 비교

|       | 전통행정이론         | 신공공관리론        | 신공공서비스론         |
|-------|----------------|---------------|-----------------|
| 합리성   | 개괄적 합리성        | 기술적 · 경제적 합리성 | 전략적 합리성         |
| 관료 역할 | 행정인            | 기업가           | 조정자 · 봉사자       |
| 공익    |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 개인들의 총이익의 합   |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
| 대상    | 고객 · 유권자       | 고객            | 시민              |
| 정부 역할 | 노획기            | 방향잡기          | 봉사, 서비스         |
| 조직    | 기존 정부기구        | 민간 · 비영리기구    | 연합체 구축          |
| 책임    | 계층제적           | 시장지향적         | 다면성 · 복잡성       |
| 구조    | 관료적 조직         | 분권적 조직        | 협동적 구조          |
| 동기    | 임금, 편익         | 기업가정신         | 시민정신            |

18

중요도 ■■■ 난이도 ■■■

2021 국회8급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회의원이 정부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법안이 발의되기도 한다.
- ③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같은 법률 내의 조항간 모순·충돌 유무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는 체계심사는 표결을 통과한 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021 7급 선행정학 p.630

정답 · 해설

답 ④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같은 법률 내의 조항간 모순·충돌유무 및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는 체계·자구심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 ①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한다.
- ② [○] 페이고(Pay-Go) 법안이란 국회의원이 정부예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그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 ③ [○] 전원위원회의 개최 정족수는 4분의 1 이상이다(「국회법」 제63조의2).
- ⑤ [○] 「헌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으로 예산과 달리 법률의 경우는 대통령 거부권이 인정된다.

19

중요도 ■■■ 난이도 ■■■

2021 국회8급

다음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공모직위는 공무원에게만 개방하며 민간인은 지원할 수 없다.
- ㄴ. 개방형직위는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직 및 별정직은 제외된다.
- ㄷ. 중앙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의 개방형직위 지정범위에 관해 중앙인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ㄹ. 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제도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 ㅁ.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2021 7급 선행정학 p.527

정답 · 해설

답 ③

ㄴ, ㄷ, ㅁ은 틀리다.

- ☑ ㄱ [○] 공모직위는 공무원에게만 개방하여 부처내외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므로 민간인은 제외된다.
- ㄴ [×] 개방형직위의 지정은 일반직뿐만 아니라 별정직과 특정직(외무직 등)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모직위는 일반직과 특정직 등 경력직 공무원만 가능하다.
- ㄷ [×] 중앙정부부처의 장은 소속기관의 개방형직위의 지정범위에 관해 중앙인사기관의 장(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2008년 폐지).
- ㄹ [○] 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제도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여 부분적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 ㅁ [×]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의 경우, 정책집행자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거나 정책집행자가 정책목표를 지지하지 않을 때,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 ② 지시적 위임형의 경우,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관리적 행위에 관한 권한들을 정책집행자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정책집행자는 행정적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 ③ 지시적 위임형의 경우, 정책집행자들은 정책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수의 집행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협상형의 경우, 정책집행자들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해서 정책결정자와 협상을 하게 되고, 만약 정책집행자들이 정책결정자가 제시한 정책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응 또는 불집행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관료적 기업가형의 경우,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한다.

2021 7급 선행정학 p.287

정답 · 해설

답 ⑤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하는 것은 관료적 기업가형이 아니라 **재량적 실험가형**이다.

- ☑ ① [○] 고전적 기술자형의 정책실패 이유는 기술적 결함이다.
- ② [○] 지시적 위임형의 경우 정책 결정자는 집행자에게 목표를 성취하도록 지시하고 행정적 재량권(정책 집행에 필요한 정도의 상당한 재량)을 위임한다.
- ③ [○] 지시적 위임형의 경우에도 정책집행자들이 정책수단에 대하여 집행자 또는 집행기관 간 행정적 협상(합의)을 한다.
- ④ [○] 협상형의 경우 정책집행자들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해서 정책결정자와 협상을 하고,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책목표의 왜곡, 정책 불집행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의 비교

| 구분   | 개방형직위                               | 공모직위                                                 |
|------|-------------------------------------|------------------------------------------------------|
| 사유   |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                |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                                      |
| 범위   | 공직내외                                | 부처내외(공직내부)                                           |
| 임용기간 | 5년 이내(2년 이상)                        | 기간제한 없음(2년간 전보제한)                                    |
| 대상   | 고위공무원 직위총수의 20% 이내 + 과장급 총수의 20% 이내 | 고위공무원 경력직 직위총수 30% 이내 + 과장급 총수의 20% 이내 <sup>1)</sup> |
| 직종   | 일반 · 특정 · 별정직                       | 경력직에 한함(일반 · 특정직)                                    |
| 지정기준 | 전문성 · 중요성 · 민주성 · 변화필요성 · 조정성       | 직무공통성 · 정책통합성 · 변화필요성                                |

1) 과장급 미만은 자율 지정

우리나라 중앙예산부서의 재정관리 혁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지능정보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 ②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
- ③ 예산 절감이나 국가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제공하는 예산성과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 ④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는 정부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1 7급 선행정학 p.717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

| 유형       | 정책결정자의 역할        | 정책집행자의 역할   | 정책집행의 실패이유                | 정책평가 기준   | 집행자의 재량권       |
|----------|------------------|-------------|---------------------------|-----------|----------------|
| 고전적 기술자형 | 구체적인 목표 설정       | 기술적 권한 소유   | 기술적 결함                    | 효과성       | 재량권 X          |
| 지시적 위임가형 |                  | 집행적 권한 소유   | + 협상의 실패                  | 능률성 · 효과성 | 어느 정도 (상당한) 재량 |
| 협상자형     | 목표수단에 대해 집행자와 협상 |             | + 적응적 흡수 (정책목표의 왜곡) 및 부집행 | 주민만족도     | -              |
| 재량적 실험가형 | 추상적인 목표 지지       | 목표와 수단의 구체화 | + 책임 회피 및 기만(사기)          | 수익자 대응성   | 광범위한 재량        |
| 관료적 기업가형 | 집행자가 설정한 목표 지지   | (추상적)목표 설정  | + 정책의 사전오염(선매)            | 체제유지도     | 가장 광범위한 재량     |

善 고지협재관   善 기행협구추   善 기협왜책오   善 효능만대유

정답 · 해설

답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지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주무관청**이 한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 ☑ ①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지능정보화사업이나 연구개발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이 된다.
- ③ [○] 예산성과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지급 가능하다.
- ④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이나 연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 ⑤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옳은 지문이다.



혼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다음에서 모두 고르면?

- ㄱ. 혼돈이론은 안정된 운동상태를 보이는 계(系)가 어떻게 혼돈상태로 바뀌는가를 설명하고, 또 혼돈상태에서 숨겨진 질서를 찾으려는 시도이다.
- ㄴ. 혼돈이론에 의하면, 혼돈은 스스로 불규칙하게 변화할 뿐 아니라 미세한 초기조건의 차이가 점차 증폭되어 시간이 얼마간 지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 ㄷ. 혼돈이론은 선형적 변화를 가정하며, 이는 뉴턴(Newton)의 운동법칙을 계승한 것이다.
- ㄹ. 혼돈이론에서 설명하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는 과정은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와 공진화(co-evolution)이다.

- ①  $\neg$ ,  $\perp$   
②  $\perp$ ,  $\top$   
③  $\neg$ ,  $\perp$ ,  $\sqcup$   
④  $\neg$ ,  $\top$ ,  $\sqcup$   
⑤  $\neg$ ,  $\perp$ ,  $\top$ ,  $\sqcup$

2021 7급 선행정학 p.454

## 정답 · 해설

답 ③

다음 틀리다.

- ☑ ㄱ [o] 혼돈이론은 안정된 운동상태를 보이는 계(系)가 어떻게 혼돈상태의 복잡계로 바뀌는가를 설명하고, 또 혼돈상태에서 숨겨진 질서, 의미있는 질서를 찾으려는 시도이다.
- ㄴ [o] 혼돈이론에 의하면, 혼돈은 스스로 불규칙하게 변화할 뿐 아니라 미세한 초기조건의 차이가 점차 증폭되어 시간이 얼마만 지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이른바 초기치민감성을 중시한다.
- ㄷ [x] 혼돈이론은 비선형적 변화를 가정하며, 이는 뉴턴(Newton)의 운동법칙과 달리 작은 원인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예측불가능의 순환고리적 인과관계를 중시한다.
- ㄹ [o] 혼돈이론에서 설명하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는 과정은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와 공진화(co-evolution)이다. 자기조직화란 자생적 학습능력을 말하고 공진화란 원인과 결과변수가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진화하는 공동진화를 말한다.

## ☞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비교

|       | 총사업비 관리                                                                                                                                                                           | 예비타당성 조사                                                                                     |
|-------|-----------------------------------------------------------------------------------------------------------------------------------------------------------------------------------|----------------------------------------------------------------------------------------------|
| 개념    |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정하여 기재부장관과 협의하게 하는 재정통제제도                                                                                                         |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재부장관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하는 재정통제제도                      |
| 목적    | 착수된(시작된) 대형사업의 총사업비 팽창을 막기 위한 사전적·과정적 통제수단<br>* 설계변경 등으로 총사업비나 사업기간 변경시 기재부장관은 타당성 재조사 실시 및 국회에 결과 보고                                                                             | 대규모사업의 신중한 착수를 위한 사전적 통제수단<br>* 중앙관서장의 신청 또는 직권, 국회의 요구로 기재부장관이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     |
| 도입 시기 | 1994년                                                                                                                                                                             | 1999년                                                                                        |
|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50조, 총사업비 관리지침                                                                                                                                                           |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 조사지침                                                                     |
| 대상 사업 | 국가가 직접 시행 또는 위탁사업, 국가예산·기금의 보조를 받아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다음 사업<br>①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토목 및 지능정보화사업<br>②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인 건축사업<br>③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인 연구개발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 중 다음 사업<br>①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br>② 지능정보화사업<br>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다음에서 모두 고르면?

- ㄱ.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제도의 종단면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국가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면, 역사적 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나 조직에서 어떻게 유사한 제도가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 ㄴ. 역사적 제도주의에 의하면, 제도는 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으면 안정적인 균형상태를 유지하다가 외부의 충격을 겪으면서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경로에서 다시 균형상태를 이루는 단절적 균형의 특성을 보인다.
- ㄷ.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강조되고, 사회적으로 표준화된 규칙 또는 규범에 적절하게 순응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 ㄹ.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에서 개인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 없으며 제도에 종속될 뿐이라고 본다.

- ①  $\neg$ ,  $\perp$   
②  $\perp$ ,  $\top$   
③  $\top$ ,  $\exists$   
④  $\perp$ ,  $\top$ ,  $\exists$   
⑤  $\neg$ ,  $\perp$ ,  $\top$ ,  $\exists$

[↗ 혼돈이론](#)

|          |                                                                                                                                                                                                                                                                                                                                                                                                                                                                 |
|----------|-----------------------------------------------------------------------------------------------------------------------------------------------------------------------------------------------------------------------------------------------------------------------------------------------------------------------------------------------------------------------------------------------------------------------------------------------------------------|
| 개념       | 균형과 질서에만 집착하지 않고 혼돈과 무질서의 긍정적 측면을 파악하여 폭넓고 장기적인 변동의 경로와 양태를 찾아보려는 이론                                                                                                                                                                                                                                                                                                                                                                                            |
| 특성       | ① 통합적 연구 :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하는 가운데 부정적 환류와 긍정적 환류 등 통합적 접근 시도<br>- 복잡한 관계를 단순화하려 하지 않는다.<br>② 대상체제의 복잡성 : 행정조직은 개인과 집단, 환경적 세력이 교호작용하는 복잡한 체제라고 가정<br>③ 발전의 전제조건 : 혼돈을 회피와 통제대상으로 보지 않고, 발전의 불가결한 조건이나 기화로 이해<br>④ 자기조직화 원칙 : 조직의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조직화 능력을 전제<br>⑤ 반(탈)관료주의적 처방 : 계층제의 탈피, 업무의 유동성, 구성원의 자율성 확대, 다기능적 팀의 활용, 흐름중심의 조직, 저층구조화 등 추구<br>⑥ 이중적 순환학습 : 부정적 환류 및 부정적 엔트로피를 통한 균형 +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긍정적 환류 및 긍정적 엔트로피<br>⑦ 결정론적 혼돈 : '혼돈을 한정된 혼란', '질서있는 무질서'로 이해 |
| 자기조직화 원칙 | ① 가외적 기능의 원칙 : 중첩과 중복 허용<br>② 필요다양성의 원칙 : 체제는 다양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환경의 다양한 도전과 영향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br>③ 최소한의 구체화(표준화) 원칙 : 핵심적 사항 외에는 세부적 표준은 영점치를 피하고 자율성 인정<br>④ 학습을 위한 학습의 원칙 : 늘 현재의 규범이 행동의 적절한 근거가 되는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규범을 유지 또는 수정                                                                                                                                                                                                                                       |

- ㉠. 총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이다.
- ㉡. 계속비는 사전승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원칙적으로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다.
- ㉢.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 국고채무부담행위에는 차관, 국공채 등이 포함된다.

2021 7급 선행정학 p.715

ㄹ [×]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차관, 국공채 등이 모두 국가채무에 포함  
은 되지만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국가채무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차관이나 국공채 등이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  
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 범위 안의 것 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를 말한다.

|                                         |                         |
|-----------------------------------------|-------------------------|
| 국가채무                                    | 국고채무부담행위                |
| 국고채무부담행위 외에 국공채, 차입금, 차관 등 국가의 모든 채무 포함 | 국공채, 차입금, 차관 등 포함 안됨    |
| 차입금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됨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세입세출예산에 계상 안됨 |
| 당해연도에 현금 유입됨                            | 현금 유입 없음                |

|    |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           | 역사적 신제도             | 사회학적 신제도         |
|----|-----------------------|---------------------|------------------|
| 학문 | 경제학                   | 정치학                 | 사회학, 문화인류학       |
| 개념 | 제도 = 개인의 합리적 · 전략적 선택 | 개별국가의 역사적 맥락, 경로의존성 | 사회문화 및 상징        |
| 중점 | 제도의 균형성               | 제도의 지속성 · 상이성       | 제도의 유사성          |
| 차원 | 개인                    | 국가                  | 사회               |
| 측면 | 공식                    | 공식                  | 비공식              |
| 범위 | 좁음(미시 : 개체)           | 중범위(거시 : 전체)        | 넓음(거시 : 전체)      |
| 변화 | 거래비용 감소               | 결절된 균형 또는 우연        | 동형화(isomorphism) |
| 선호 | 외생적                   | 내생적                 | 내생적              |
| 접근 | 연역적                   | 귀납적                 | 귀납적              |
| 초점 | 경제적 효율성               | 역사적 경로 의존성          | 사회적 정당성          |

정부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규제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성과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의 선택은 피규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수단규제에 비해 피규제자가 많은 자율성을 갖는다.
- ②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투입규제라고도 한다.
- ③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 성격을 띤다.
- ④ 자율규제는 개인과 기업 등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이다.
- ⑤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2021 7급 선행정학 p.58

정답 · 해설

답 ①

①은 관리규제가 아니라 성과규제에 대한 설명이다.

☑ ② [○] 수단규제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③ [○] 공동규제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④ [○] 자율규제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⑤ [○] 네거티브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이고, 포지티브규제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이다.

규제방식의 다양한 구분

| 구분    | 종류    | 개념                        | 피규제자의 자율성 |
|-------|-------|---------------------------|-----------|
| 규제 방식 | 포지티브  | 원칙 금지, 예외 허용              | 낮음        |
|       | 네거티브  | 원칙 허용, 예외 금지              | 높음        |
| 규제 주체 | 직접규제  | 정부(규제주체)가 기업(객체)을 직접 규제   | 낮음        |
|       | 간접 규제 | 공동 민간단체에 규제권한을 위임하여 공동규제  | 높음        |
|       |       | 자율 규제대상자가 규제주체가 되어 스스로 규제 |           |
| 규제 대상 | 수단규제  | 투입(기술이나 수단, 행위)을 사전 규제    | 낮음        |
|       | 관리규제  | 작업 또는 관리과정을 규제            | 중간        |
|       | 성과규제  | 목표달성수준만을 정하고 이를 사후에 규제    | 높음        |
| 규제 시기 | 사전규제  | 행위이전을 규제(수단규제)            | 낮음        |
|       | 사후규제  | 행위이후를 규제(성과규제)            | 높음        |